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 전망

---

고 봉 준  
충남대학교

2011년 2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1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 전망

고봉준  
충남대학교

### I. 서론

이 글은 2008 년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친 금융 위기가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질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 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는 전 세계적 영향력 유지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 그 상호작용, 양국 전략적 선택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자원동원 능력 및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형성될 것이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는 중국보다 미국의 자원동원능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여 전체적으로 냉전 이후 20 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위 단극적 세계질서의 정당성 및 신뢰도를 약화시켰다. 특히 금융위기 촉발 이후에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의 미국채권 보유국이 되면서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보다 공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서 명목상으로는 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미중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의 군사안보질서가 금융위기 때문에 급격한 세력전이나 전통적인 세력균형정치의 부활 등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위기의 영향력은 간접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 행위자들의 인식과 자원동원능력에 보다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중국의 부상은 국제정치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초기 논쟁의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Mastanduno 2002; Johnston 2004; Goldstein 2003; Christensen 2001). 그간 미국 중심의 단극적 체제의 지속을 관찰하면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세력균형론(Waltz 2000; Mearsheimer 2001; Paul 2005; Pape 2005), 단극질서론(Wohlforth 1999; Brooks and Wohlforth 2002; Lieber and Alexander 2005), 세력전이론(DiCicco and Levy 2003)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21 세기 국제정치의 중장기적 전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소한 세계적 수준에서는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던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 대결 양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관련된 많은 논쟁이 입증하듯이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안보 부문에서 기존의 개념인 권력투쟁과 세력 균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으로 다 포착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상이한 이념과 경제 및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던 냉전 시기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대립은 그 이면에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라는 상쇄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두드러진 경제 성장이 일정 정도의 통합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시장평화론에 따르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경제 이익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이의 공유를 위해 국가 간 관계의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Gartzke 2007). 경제 부문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양자 또는 다자 관계의 진전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측면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대립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sup>1</sup>

‘이익상관자’(stake holder)와 ‘화평굴기’(和平崛起)개념이 시사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은 양자 간에 대립과 갈등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간 협력에 공동의 이익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양국은 1990년대 후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상호 군사훈련의 참관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0년 초 대만에의 미국 무기판매를 이유로 중단되기 이전까지 해군을 위주로 한 해상에서의 합동 구조 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군사적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 전반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점증하고 있는 군사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 잠재되어 있던 전통적 갈등 요인이 금융위기 이후에 전면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주목되던 바이나, 중국 경제력의 상대적 강화로 그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현 질서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은 중국의 상대적 강세를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전통적 의미에서 대미 균형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내의 핵심 이익 수호를 내세우는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보라는 미국의 이해 대립은 새로운 충돌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동맹의 네트워크 역시 역내 군사안보질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각국의 자원동원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의 한계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잠재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양국의 지역 전략과 군사적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는 미국의 역외균형 플러스 전략과 중국의 역내 질서 관리자 전략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국내외적 자원동원 능력의 부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영향은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2절에서는 최근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의 특징을 국방비의 증가, 동맹의 재조정 및 다자네트워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3절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안보 차원에서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양국의 전략적 태도와 준비태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는 지역 내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원동원 능력 및 역내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국가들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II.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의 특징

### 1. 국방비 점증 추세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행한 〈SIPRI 2010〉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는 냉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2000 년에 그 총 규모는 1,220 억 달러였으나 2009 년에는 2,090 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 세계 국방비에서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2008 년 불변가격 기준). 국방비의 절대적 규모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상위지출국에 속하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시켜 왔다.<sup>2</sup> 아울러 국방비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의 경우도 최근에 태국과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방비를 확충할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즉 동아시아 각 국의 국방비 증가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관찰되어오던 하나의 추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미국 및 러시아의 최근 10 년간 국방비 추이를 [표 1]에 정리하였다.<sup>3</sup>

[표 1] 2000년대 주요 국가 국방비 추이

단위: 10억\$(2008년 불변가치)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미국	377.2	380.3	427.0	486.0	530.0	555.0	564.0	578.3	616.1	663.3
중국	31.2	38.4	44.4	48.5	53.1	59.0	68.8	77.9	86.2	98.8
일본	47.5	48.0	48.5	48.6	48.2	47.9	47.3	47.1	46.3	46.9
러시아	29.7	33.0	36.6	39.0	40.6	44.2	48.4	52.5	58.3	61.0
한국	18.3	18.8	19.4	20.0	20.9	22.6	23.4	24.5	26.1	27.1

출처: SIPRI Yearbook 2010

2000 년대 이후에 관찰되는 이들 국가의 국방비 증액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전 세계 국방비 규모도 45%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국방비 규모는 동 기간에 31%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추이가 향후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에 중요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이 국방비를 점증시키는 것은 관찰되는 사실이지만, 군비 경쟁을 “한 국가의 군사력 요구 수준이 가상 적대국의 현재와 미래의 군사력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들 국가들의 증가된 국방비 자체로는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Feffer 2009).

볼(Ball)은 군비경쟁이 성립되려면 자원의 상당부분을 투여하는 급속도의 무기 확충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한 국가의 그런 행위가 제공하는 이점을 상쇄하려는 다른 국가의 시도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all 1993/4).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록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가 점증하고 있지만, 자원이 급속도로 국방비에 투여된다는 증거가 미약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아시아에서 한 국가의 무기 구매가 다른 국가의 대응 구매로 이어지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집단적인 군비경쟁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아래의 [표 2]



에서처럼, 이들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검토하면 이들의 국방비 증가가 심각한 군비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표 2] 2000년대 GDP 대비 국방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3.1	3.1	3.4	3.8	4.0	4.0	3.9	4.0	4.3
중국	1.8	2.0	2.1	2.1	2.0	2.0	2.0	2.0	2.0
일본	1.0	1.0	1.0	1.0	1.0	1.0	1.0	0.9	0.9
러시아	3.7	4.1	4.4	4.3	3.8	3.7	3.6	3.5	3.5
한국	2.6	2.6	2.4	2.5	2.5	2.6	2.6	2.6	2.8

출처: SIPRI Yearbook 2010

[표 2]에 정리된 각국의 국방비 비중은 전체적으로 보아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GDP의 3-4% 범위, 중국은 2% 범위, 일본은 1% 수준, 러시아는 3-4% 범위, 한국은 2% 중반의 수준에서 국방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는 그 자체로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제공한다. 첫째, 점증하는 국방비는 이들 국가가 현재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의 범위 내에서 국방비의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고려 외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영토 및 역사와 관련하여 전통적 갈등의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 국방비 비중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이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잠재적 군사적 충돌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Feng 2009). 둘째, 군비경쟁이나 국방비의 대폭적 증가가 관찰되지 않더라도 2000년대 들어서 전체적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된 연간 국방비 총액과 그간의 누적액들은 갈등 격화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 획득을 추진하는 군사적 요소들, 즉 지휘통제통신 체계의 개선, 전략전술 정보체계의 개선, 다목적 전투기, 초계기, 최신예 전투함, 잠수함, 전자전 체계, 신속대응군 등은 대부분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을 강화하는 데에 유용한 것이어서 각국에서 제기하는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역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국방비 전망

장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비중의 국방비 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은 금융위기의 중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현재까지 미국의 국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미국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의 국방비 지출 상위 국가들이 금융 위기의 국면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국방비를 거의 삭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Feffer 2009, 12).

예를 들어 미국은 2008년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비를 제외한 국방부 예산을 2010년에는 5,340억 달러, 2011년에는 5,470억 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내수 진작 우선 정책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10년간의 점증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우선 금융위기가 미국에 주는 경제적 부담은 실질적인 것이다. 2009 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1 조 8,000 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었고, 2010 년에도 재정 적자 규모가 1 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비는 중단기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연방 예산의 결정 구조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국방비의 전면적 감축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용이한 사항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국방예산은 주기적으로 증가와 감축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기는 했다. 예를 들면 1990 년대 중반부터 약 1/3 가량 줄었다가 2000 년부터 국방인력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이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9/11 이후에 대테러전 때문에 미국의 국방비는 다시 급증한 바 있다(McCaffery and Jones 2004, 18). 또한 미국의 국방예산은 사회보장 또는 의료보험처럼 영구히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출이 승인되어야 하는 재량적 성격의 예산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는 용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예산은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system: PPBES)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규모의 급변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4 년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2 년의 예산과 기획주기를 가지고 국방예산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그 첫째 해에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이 발표된 후 두 번째 해 초기에 <4 개년국방검토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가 발표되게 되어 있다(McCaffery and Jones 2004, 142-143). 아울러 미래국방계획프로그램(future years defense program)은 총지출금액(Total Obligational Authority: TOA)이 인력과 방위력 개선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전년도와 당해 연도 및 다음 2 개년과 그 다음 4 개년도 예산을 미리 상정한 후 총 11 개 군 주요사업으로 배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다(McCaffery and Jones 2004, 73-76). 따라서 금융위기로 오는 압박이 결코 작지는 않겠지만, 미국 국방정책의 기초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방비 규모의 급감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둘째, 현재 국방정책의 기초는 미국 국방비의 급감을 허락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GNP 규모 약 1.5 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1990 년부터 1999 년까지 10 년 간 25% 정도 감축시킨 바 있다. 당시의 낙관적 국방예산 편성이 경쟁자의 부재라는 국제정치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이례적인 국방예산 편성 역시 미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주도권의 유지를 위해 국방비 등을 포함한 대외정책 자산을 단순히 축소할 수는 없는 고민을 가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역시 2010 년 초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2010 년에는 전년도보다 국방비를 7.5%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sup>5</sup> 이는 비록 이전 10 여 년간 평균 증가율인 12.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융 위기로도 불구하고 2009 년의 증가율 15%에 이어 2 년 연속 상당한 규모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배경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방비의 평균 증가율(15.95%)은 중국 정부 총예산 증가율(18.4%)을 하회해왔다(Chen and Feffer 2009, 50).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미친 금융위기의 영향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이에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는 단기적으로는 그 증가추세가 급격히 역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6</sup> 따라서 지역 전체적으로 보아 국방비의 감소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고, 이는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3. 동맹의 재조정과 다자 네트워크의 활성화

소련의 해체로 냉전기 양극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한 동안의 조정기를 거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치·군사적 동맹이 재정립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에는 일본의 신 방위지침에 유사시 양국 간 공동대처를 명시하고, 일본은 1998년에 이미 미국 주도의 전역미사일 방어체제에 동참을 결정함으로써 미일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은 부시 행정부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와 미국의 군사변환 추진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제고되었다. 특히 2005년 2월에는 미국과 일본 양국이 대만의 안전을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등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1990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 이후에 추진되던 주한미군의 감축도 1992년에 새로운 전략구상이 발표되면서 중단되고, 이후 1998년에 포괄적 개입을 명시한 동아시아전략보고서의 공표를 통해 한미 동맹의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어 2008년 4월에 한미 양국 간에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합의가 도출되면서 한미동맹의 범위는 아태지역과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동맹 중시 정책은 21세기형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아울러 동맹을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동맹의 강화는 한미일 세 나라의 인식 속에서 냉전 시기에 소련이 제기했던 안보 위협이 냉전 해체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대상이 중국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동맹 재조정 노력에 대해 중국도 중·러 관계의 강화와 북·중 관계의 정상화로 대응하였다. 1994년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시켜 왔고, 최근까지 공동 군사훈련과 무기 거래 및 기술 이전 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악화되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1999년 이후 복원되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1998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의 강화로 중국을 견제 및 포위하려 한다고 중국이 판단한 것에서 나온 노력의 일환이었다(박홍서 2008, 303-304).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의 지역 내 동맹 재조정 노력은 현실주의 이론에서 전통적으로 관찰해오던 세력 균형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의 재조정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잠재적 적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의 확보가 지리적 격리로 인해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서 군사적 협력 및 거점으로 활용할 기반을 찾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경제협력을 매개로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적 고려 사항이었지만, 초강대국 미국이 지역 내에 동맹국들까지 확보하는 상황은 지역 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동이었고 이에 대한 가능한 균형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7</sup>

아울러 이러한 전통적 동맹의 재조정 움직임과 함께 비전통안보 측면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역내 국가들 사이에 안보협력 더 나아가서는 공식적인 제도적 협력의 증진이 관찰된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활동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상하이협력기구는 탈냉전 이후 완화된다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요인 대신에 점증하는 비전통적 위협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변경 지역의 안정,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이다. 상하이협력기구도 애초에는 정상회담으로 시작되었다가 2001년부터 6개 회원국과 여타 옵서버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박병인 2005).





다른 한편으로 PSI 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시도하는 국가가 무기와 관련 기술을 거래하기 힘들도록 반확산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안보 레짐이다. PSI 는 차단원칙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형태의 레짐인데, 이러한 자발성을 기초로 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90 개국 이상이 동참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참여 국가의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PSI 관련 훈련도 그 내용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장은석 2010).

그런데,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PSI 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비전통 안보 관련 국가 간 협력은 여전히 전통적 강대국 정치의 하부 구조에 머물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지역 내 현안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시작된 상하이협력기구도 연례적으로 ‘평화의 사명’ 훈련을 실시하면서 점차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포위 전략에 맞서는 군사동맹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협력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증거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세력 간의 협력을 전향적으로 심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기제 자체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제의 활동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질서의 미래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권력 관계의 진행과 밀접하게 맞물려 상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III. 미중의 상호 인식과 대응 및 주변국의 반응

####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이해와 중국

최근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크게 두 가지 전략적 이해를 추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우선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안정적으로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오바마 등장 이후 행정부 차원의 글로벌한 목표로 설정된 비확산의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10 년 5 월말에 열린 제 2 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이후 천안함과 비핵화 문제를 두 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하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6 월에 실시하기로 예정했던 서해상에서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은 게이즈 국방장관의 방중이 거절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위에서 얘기한 미국의 두 가지 전략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할 때 함의가 비로소 분명해진다. 즉 천안함 사태 이후에 한·미의 대북공조가 전에 없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대북공조의 속도와 방향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크게는 소위 제국적 질서나 전 세계적 헤게모니의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스마트 파워 및 공공외교 강화를 포함하는)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자국에 불리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안보와 관련해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다. 2010 년에 발표한 <4 개년 국방검토보고서> (QDR)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구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향유하도록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동시에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에 미국은 자국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대미 최대 채권국이 되었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일정 정도 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입장에서서는 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 구매력을 급격히 상실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측이 그 어느 때보다 일탈하기 어려운 균형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에게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북한 및 북핵문제의 해결,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등의 현안에 있어서 미국과 책임을 나누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있었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 세기에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중 간의 전략경제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지역 및 세계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 이러한 협력관계를 축으로 개입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화의 테이블에 동아시아 향후 질서의 핵심인 양국 전략적 군사력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전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2. 미국의 대중 군사적 고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즉 각종 전략적 무기체계와 지역 내의 동맹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권력 투사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가상 적국인 중국의 역외 권력 투사능력을 제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고려는 미국의 경제력과 압도적인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무기체계의 구축으로 큰 무리 없이 충족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강화된(assertive) 핵심적 이익에 대한 주장은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 중국의 개발도상국 주장 (〈인민일보〉 9 월), 중국의 서해 상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경고(〈환구시보〉 9 월)).

미국의 입장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기동성과 지역 내 동맹국과의 효율적인 협력은 군사적 안정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간주하여 왔다. 이런 관점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 즉 세력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권력 투사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래에서 부연하는 것처럼 중국의 최근 군사기술의 발전은 미국의 군사통신 네트워크를 교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해외 기지를 타격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다(Krepinevich 2009). 미국은 이미 대만해협에서의 권력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신장되는 군사적 능력이 국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따라서 전통적인 권력 투사력의 측면에서 최소한 현상유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해외 주요 기지를 강화하고, 대형 잠수함 및 대잠 전투력 향상 등을 포함한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중국의 군사력 증진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력 확충이라는 일종의 안보딜레마적인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 3.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군사력 증강<sup>8</sup>

중국의 부상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는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중국의 존재는 이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에 있어서 미국에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셈이다. 최근까지 중국은 근본적인 국가이익으로 안전과 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최근 국방비의 증가도 이러한 과제의 일환으로서 군장비의 현대화와 장비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주로 투여되는 것으로서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여 왔다(Chen and Feffer 2009).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는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최근 십 수 년간 국방비를 매년 평균 10% 이상씩 확대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국방비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재래식 무기의 차세대 전력화 및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군사혁신을 통해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력으로 육성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투사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전력(초수평선 레이더, 정찰위성, 이동식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 등)은 장기적으로 지역을 넘어서는 군사력 투사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중국은 2010 년까지는 기존 장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선택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차세대 전력을 도입함으로써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의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15 년 내에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통해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력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로의 접점에서 중국은 자국의 미사일 능력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사일의 생존가능성과 공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DF-5 액체연료)외에 그 개량형인 DF-5A(사거리 13,000km 로 연장된 개량형), 이동식인 DF-31(사거리 7,250km 고체연료), DF-31A(사거리 11,270km 고체연료)를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아울러 DF-5 에 탑재될 각개유도다탄두(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를 개발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이동식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여 지역 수준에서의 핵 억지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은 항공모함의 건조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운용 중인 핵잠수함에 조만간 사정거리 8,000km 의 장거리 탄도미사일(SLBM) JL-2 를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hase, Erickson, and Yeaw 2009, 73-74). 특히 DF-21C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500km 수준으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항공모함 탑재기의 작전 반경은 1,000km 수준이어서 이 미사일은 적 항공모함에 작전 금지구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최근에 사거리 2,000km 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배치했고, Su-27 및 Su-30MK 등의 전폭기, 자체 개발한 J-10, FB-7A 전투기, 신형 J-X 스텔스 전투기, KJ-2000 조기경보기 등을 배치함으로써 대공 방어력과 공격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7 년 1 월의 위성요격(anti-satellite: ASAT) 테스트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용 위성을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052C Luyang II 및 051C Luzhou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054A Jiangkai 소형구축함을 배치하여 미국과 일본이 배치한 이지스방어망과 유사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ughes 2009, 87).



중국의 이러한 미사일 능력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넘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투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능력은 미국의 군사통신 네트워크 파괴 또는 교란 능력, 미국의 해외 기지에 대한 공격력 구축 등으로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초수평선 레이더, 무인비행기, 정찰위성의 강화를 통해 미국 해군력의 효율적 작전을 저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유사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행동에는 많은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지역 내 군사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미국과 중국의 선택 및 상호 인식 외에도 지역적으로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부 구조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지역 내 동맹과 그러한 동맹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소위 ‘확장역지’ 역시 향후 군축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추구하고 확장역지의 변화 가능성은 역내 중·일 관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향후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은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와 연계할 수 있는 자산과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확보하는 전략적 유용성만큼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확보하는 전략적 유용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금년에 타결된 전략무기감축협상이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동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핵감축협상으로 미국이 그간 제공해왔던 핵 확장역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고,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내의 안보불안 심리가 강화된다면 이런 점은 북한과 중국의 핵전력에 대응해야 하는 양국에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고봉준 2010, 235-236).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움직임과 거듭되는 도발적 행위는 동북아시아에서 기존에 진행되어온 취약한 다자협력과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행위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군사안보질서의 안정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새로운 안보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복잡함을 더해주는 부담을 중국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공표된 2010 방위계획대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현대화, 원거리 투사능력의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금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분명히 제기되었다. 물론 그 4장에서 중국과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동적 방위력’으로 군의 첨단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남아있다(박영준 2010, 3-4). 일본은 이미 2004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부터 방어력 증강은 물론 잠재적인 공격 능력의 강화를 추진하여 왔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봉준 2010, 237-238).





#### IV. 결론 및 함의

금융위기는 미국이 자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세계 공공재 제공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미국과 중국 간에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를 통해 재확인되었듯이 향후에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정도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경쟁으로 점철될 것인지 아니면 양국이 보다 포괄적인 국제안보 이슈에 집중하여 지구적 경제 현안과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는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다자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부분적으로나마 자국의 이해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과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주장의 접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호의존의 필요성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에 안보딜레마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천안함 사태는 동아시아 기존의 역학구도에 대한 하나의 시험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북미관계 악화 등은 천안함 사태 이전에 노정되었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천안함 사태의 독립적인 영향력 때문에 관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이한 점은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상의 국제공조의 틀을 어느 정도 허무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통해 협력의 기초가 존재하였으나, 천안함 사태는 이러한 공통분모를 크기를 줄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인 실험을 한 셈이다.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의 서해 훈련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는 양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로서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즉 기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권력 투쟁적 속성을 표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유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반도에서 조성된 긴장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역외이전 문제가 미국의 주장대로 관철되는 성과를 얻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도 미국이 예정했던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명분상으로 서해가 자국의 배타적 영역 내에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가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양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다소 고무해 보이는 미어샤이머(Mearsheimer)의 비관적 전망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어샤이머(2010)는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권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미국이 먼로 독트린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서반구의 지배력을 확보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미 공식 문건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중국의 동아시아 지배는 막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 미어샤이머가 보는 가까운 장래 동아시아의 안보 경쟁의 모습이다. 중국으로서는 주권의 수호, 영토 통일성 보호,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자원이동 통로의 확보 등을 위해 군사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균형은 중국 쪽에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에서 중단기적으로 예상되는 갈등의 정도가 냉전시기보다 약하다는 판단이 자칫 지나친 낙관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담이 적은 곳에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이다.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방



비 지출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의 도발 및 영토분쟁과 관련되어 전개되어온 일련의 상황은 동아시아의 군사안보질서가 보다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비스의 주장처럼 안보협력은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안보 추구 행위가 고비용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인식을 통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다(Jervis 1982, 358). 이러한 인식이 공유될 수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협력적 안보를 보다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군사안보질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강대국 정치 영역에서 강대국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전쟁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극심한 안보경쟁 상황에 진입한다면 우리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

## 주(註)

<sup>1</sup> 예를 들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과 대만은 양안 사이의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여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체결 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경쟁과 갈등과는 별도로 증진되고 있는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up>2</sup> 이 중 인도네시아는 2008 년에 국방비 지출이 7% 감소하였는데, 산유국임에도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에 높은 원유가격이 부담을 주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khoi) 전투기를 들여오기 위해 차관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IPRI (2009, 197).

<sup>3</sup>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리적 동아시아 국가들의 2009 년 국방비 총액 2,090 억 달러 중 한·중·일 세 나라의 비중이 83%에 달하여, 국방비 규모와 관련해서 이외의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방비 추이를 검토함에 있어 포함시켰다.

<sup>4</sup> 따라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O'Hanlon 은 최소한 현재의 국방비 규모에서 10% 감축시켜야 2010 년대 중반까지 부채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상군 규모를 클린턴 시기의 수준까지 축소시켜야 하고, 무기획득도 보다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오한런은 주장한다. 그는 줄어든 지상군 병력 수준과 선택적으로 획득된 무기체제로도 대규모의 전면적 지상전이 아니라면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음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O'Hansion (2010).

<sup>5</sup>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budget.htm>



<sup>6</sup> 금융 위기 직후에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범위와 심도 면에서 국제체제의 근본적 질서를 흔들 정도이고 그 결과로 각국이 본격적인 국방예산 합리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 앞의 주장에 대해서는 Renard(2009) 참조.

<sup>7</sup> 이 시기 중국의 정책은 현실주의에서 전통적으로 언급하는 균형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조영남(2009) 참조. 조영남은 이 시기 중국의 동맹정책을 유연한 균형 정책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이 미국과의 대립각을 직접 세우지 않고 제한적 군사력 확충, 이슈에 따른 미국과의 선별적 협력, 다자 지역안보체제의 추진 등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성균형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up>8</sup> 이 부분은 고봉준(2010, 239-241)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첨삭 및 수정을 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고봉준. 2010.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군비경쟁의 극복.”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평화론: 쟁점, 과제, 구축전략》. 한용섭 편, 213-248. 서울: 아연출판부.
- 박병인. 2005. “상하이협력기구(SCO) 성립의 기원: ‘상하이 5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중국학연구》 33.
- 박영준. 2010.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 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 〈EAI논평〉 16.
- 박홍서. 2008.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42, 1: 299-317.
- 장은석. 2010.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국제정치논총〉 50, 1.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EAI국가안보패널보고서〉 32.
- Ball, Desmond. 1993/94. "Arms and Affluence: Military Acquisi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national Security* 18, 3: 78-112.
- Chase, Michael S., Andrew S. Erickson, and Christopher Yeaw. 2009. "Chinese Theater and Strategic Missile Force Modern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2, 1: 67-114.
- Chen, Sean and John Feffer. 2009. "China's Military Spending: Soft Rise or Hard Threat?" *Asian Perspective* 33, 4: 47-67.
- Christensen, Thomas. 2001.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 4: 5-40.
- Feffer, John. 2009.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33, 4: 5-15.
- Feng, Zhu. 2009. "An Emerging Trend in East Asia: Military Budget Increases and Their Impact." *Asian Perspective* 33, 4: 17-45.
- Gartzke, Erik. 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 1: 166-191.
- Goldstein, Avery. 2003. "An Emerging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ies: A Neo-Bismarckian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ed.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57-10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ughes, Christopher W. 2009. "Japan's Military Modernisation/Modernization: A Quiet Japan-China Arms Race and Global Power Projection." *Asia-Pacific Review* 16, 1.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 2: 167-214.
- Jervis, Robert. 1982.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2: 357-378.
- Johnston, Alastair Iain. 2004.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ed. Samuel S. Kim, 65-100.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Krepinevich, Andrew F. 2009. "The Pentagon's Wasting Assets: The Eroding Foundation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88, 4: 18-33.
- Mastanduno, Michael. 2002. "Incomplete Hegemony and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In *America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ed. G. John Ikenberry, 181-210.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McCaffery, Jerry L. and L. R. Jones. 2004.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문영세•권현철•김태준•신용도 역. 2006. 《미국의 국방예산》.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Mearsheimer, John J.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 381-396.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0.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Defense.
- O'Hanlon, Michael. 2010. "Defense Budgets and American Power." *Policy Paper December*.
- Renard, Thomas. 2009. "The Coming Order: Strategic and Geopolitical Impacts of the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Review*.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9. *SIPRI Yearbook 2009: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0. *SIPRI Yearbook 2010: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필자약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과 교수. 고봉준 교수는 미국 노트르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미국 외교안보 정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 군사기술 및 개념 확산, 그리고 군비통제 등이 있다. 최근 저술로는 “경제위기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현실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2009),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08), “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한국정치연구〉, 2007) 등이 있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mailto: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mailto:ygkim@eai.or.kr)

